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권익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9+10 vol.34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

09+10 2013 vol.34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 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CONTENTS

9+10 vol.34

기획특집

04 커버 스토리

- 亞-太 지역 반부패 기관장 서울집결
반부패 국제공조 확대
-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싱가포르 · 호주 · 홍콩 사례에서 배우다

희망 전하기

10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오픈

14 세대공감 소통

한글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6 이렇게 바뀔니다

-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빨라집니다!
-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생깁니다

20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22 110 행복 레시피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신설 도로로 둘러싸인
교통섬 토지 소유주들의 고충 해결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국민권익 이슈

과로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학생 70.7% 사교육 참여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서해 최대의 수산물 집합소 서천특화시장

38 꼭 알아두세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40 건강 365

액! 올바르게 먹어요

42 감성충전

가을엔 축제하세요

46 이야기 목민심서

공정(公正) · 청렴(淸廉) · 지성(至誠)

48 뉴스 & 피플

국민신문고 해외 수출
업무 협력 MOU 체결 외

50 독자의 소리

04

24

42

2013 vol.34 9+10월호

발행일 2013년 10월 4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디자인신화 02. 324. 6852

표지 작가 정윤미

인쇄 (주)이펙피앤피

Anti-Corruption Agency Forum

亞-太 지역 반부패 기관장 서울집결 반부패 국제공조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청렴을 책임지는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여러 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만남이다. 2002년에 시작, 2년마다 개최되는 ACA 포럼은 어느새 7회 째를 맞이했다.

글 김성숙



▲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 로얄호텔에서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기관들의 원활한 정책교류와 업무협력을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반부패기관장회의(ACA Forum: Anti-Corruption Agency Forum)'가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9월 2일, 서울 삼성동에서 8개국 9개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으며, 9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는 본회의의 참가자 및 국내 반부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이 진행되었다.

각 나라의 정책과 관행 토론

'반부패기관장회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됐다. 이성보 위원장은 "2002년과 2009년에 이어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기

구의 기관장들 간 정책 대화의 장을 제공해왔습니다."라는 말로 개회를 선언했다. 한국은 2002년 포럼 출범 이래 사무국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각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토론시간을 가졌다. '전형적인 뇌물을 제외한 선물 및 금품 제공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홍콩 염정공서가 발표하고 이후 각국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호주 법집행청렴위원회((ACLEI)의 회원가입을 승인하였고 201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음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8개국 9개 반부패기구 대표 서울에서 만나다

이번 반부패기관장회의 본회의에는 아태지역 8개 국가 9개 반부패기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권익위



▲9월 2일 서울 삼성각에서 8개국 9개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대표 30여 명이 반부패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홍콩 염정공사, 필리핀 옴부즈만 등 총 7개 회원기관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에 호주 법집행청립위원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고 베트남 감찰원이 참관기관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에는 콘치타 모랄레스 필리핀 옴부즈만, 필립 모스 호주 법집행청립위원회 위원장, 테레사 해밀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방위 부위원장, 아드난 프라자 인도네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응우옌 반 판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참관) 등 장·차관급 인사 7명이 포함됐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활동 발표도 이어지다

권익위 박진영 부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8월 2일 국회에 제출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 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권익위는 부패 예방 및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청렴연수원을 건립하여 청렴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1,878건의 부패신고를 접수하여, 67건을 조사기관에 보냈고 부패 신고에 대해 총 512백만원(약 427,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밝히고, 이어 올해 4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10만2천유로(1억3천만원)의 재정기여금을 제공하는 등 반부패 국제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내용도 강조했다.

‘서울선언문’ 후속조치로 열린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포럼 둘째 날인 9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는 아태지역 주요 반부패기구 대표단과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이 반부패기관장회의와 연계하여 열렸다. 이는 20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5차 반부패기관장회의에서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천명한 ‘서울선언문’ 후속조치로, 회원국 간의 반부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참석자와 악수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에서 강연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이날 우수사례 포럼에는 반부패기관장회의의 참가기관인 8개국 9개 반부패기구 대표단 30여 명 외에도 동티모르 부방위 대표단, 국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장관급 2명(한국, 필리핀), 차관급 3명(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기관의 고위급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반부패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부패 없는 지구촌을 향해 201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역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략과 경험’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기조를 설명해 한국의 청렴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해마다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와 부패신고자 보호정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권익위가 펼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해 실무적 경험을 곁들여 참가국들에게 상세히 소개했다.

그 밖의 연사들도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 및 신고자 보호(호주), 반부패·청렴 홍보(싱가포르), 반부패 아카데미(말레이시아), 윤리개발센터(홍콩), 청렴도 관리 프로그램(필리핀)을 주제로 자국의 반부패 제도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이성보 위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경험이 각국 반부패기관의 정책 수립과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권익위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ACA 포럼은 한국에 사무국을 두고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과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 2002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년마다 열리고 있다. 회원은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7개국 8개 기관으로 다음 회의는 201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싱가포르·호주·홍콩
사례에서 배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 호주, 홍콩 순이다. 지난 9월 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에서 공개된 싱가포르·호주·홍콩 반부패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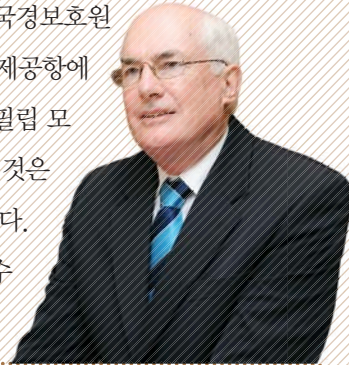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강한 처벌

싱가פור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2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청렴한 국가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의 앙 샤우 리안 부국장은 “정부가 부패 범죄에 엄단 의지를 밝히고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부패 행위를 없애지 못했다면 금융 및 교통 허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부패 범죄를 중범죄로 분류해 엄격하게 처벌하며, 부패를 살인, 마약 밀수, 횡령 등과 같이 영장 없이 구속 가능한 범죄로 분류한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공·민간 부문 구분 없이 모든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이상,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호주, 호주세관국경보호원의 부패 적발에 초점

호주 법집행정령위원회(ACLEI)는 2006년 12월에 설립된 반부패기구로 지난 6년 동안 호주세관국경보호원의 부패 방지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호주연방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 호주 시드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와 관련하여 5명의 국제세관국경보호원 직원을 포함해 22명이 구속되었다. 필립 모스 호주 법집행정령위원장은 “호주나 한국처럼 다양한 나라의 반부패기관들이 만나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포럼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부패 방지 활동이 각국가별로 이뤄지는 것을 뛰어 넘어 국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콩,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이 관건

홍콩 염정공서(ICAC) 리키 야우 수사국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강력한 조사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을 꼽았다. 1974년 설립된 염정공서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부패방지법과 조례를 제정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2007년 염정공서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인의 99%가 염정공서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염정공서는 체포·감금·보석 승인권, 압수권 등 우리나라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다.



희망 전하기

10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오픈

14

세대공감 소통

한글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6

이렇게 바꿉니다

-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빨라집니다!
-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생깁니다

20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22

110 행복 레시피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오픈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 권익위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글 김희정



복지 부정수급 문제

정부의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등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이 누수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내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접수하는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가 없고 조사·처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후속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부 내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10월 중에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 중인 정부민원 대표전화인 110을 복지 부정수급 신고전용 핫라인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제 복지 부정수급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복지 부정수급 신고전용 핫라인(국번 없이 110)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상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부패신고 전용 홈페이지인 청렴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복지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즉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신고센터에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을 배치해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전문적으로 신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접수 후에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첩한다. 조사·수사기관은 이첩 받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통보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의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각급 기관별 처리·진행사항 모니터링, 처리결과 및 통계관리 등을 총괄 관리한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보상시스템 적극 운영

복지 부정수급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없어 외부로 부정수급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부정수급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신고자의 보호 요청 시 관련기관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보호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는 취업알선, 전직훈련 등 맞춤형 신고자 보호를 하게 된다. 신고로 인해 국고환수 등 수입이 발생하거나 공익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권익위는 복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발생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후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특히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하라인 설치의 최종 목표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애초에 없애고, 신고센터를 통해 발견되는 구조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총괄해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정부복지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를 말함.

부정수급이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행위

복지서비스 예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A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고사 B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로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회사 대표 D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개인병원 원장 C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복지사업 부정수급 주요 사례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직업훈련학원 대표 F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훈련생 360명은 학원에 명의만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사회복지관관장 D는 노인요양센터 수용 인원이 20명인데도 정원 외 5명을 추가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자 G는 노인 대상 전화사업과 효(孝)문화 연구소 운영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당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

한글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머리말에서,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므로, 중국말을 적는 중국의 글자로서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이것은 그의 민족 자주정신의 표현이었다. 또한, 같은 글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뜻을 글로 적으려 해도, 한자는 우리말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새 글자를 만든다'는 창제 취지를 밝혔다. 이는 당시 우리 백성의 대부분이었던 문맹자들을 깨우쳐, 그들에게 골고루 밝은 세상을 열어 주려는 세종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 뜻을 이어받고자 우리 겨레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리고 있다.

글 성기지 한글학회 학술부장

지구상에서
가장 간편한
문자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쉽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모음자와 자음자가 구분되어 있는 한글은 모음자의 수(홀모음자 10개, 겹모음자 11개)가 세계 모든 문자 중 가장 많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현대의 규범대로만 조합해도 11,172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 불과 24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천하 만물의 형상을 다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실로 '머리 좋은 이는 한나절 만에, 머리 나쁜 이라도 사흘이면 깨우친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간편한 문자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우리 겨레에게 민주와 평등을 일깨웠다. 한글로써 기나긴 문맹의 땅굴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한글로써 밝은 세상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경축!
한글날

한글 탄생의 기쁨과 의미를 온 겨레가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나라 안팎에서 펼쳐질 것이다. 한글날 행사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데, 근래에는 컴퓨터와 통신 매체 발달에 영향을 받은 행사들이 선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한글학회의 '손글씨 공모전'과 '휴대전화 쪽글(문자 메시지) 자랑 한마당'이다. 글자 입력 도구가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글자판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손글씨(손으로 직접 쓴 글씨)를 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까닭에 손으로 직접 쓴 아름다운 글씨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손글씨 공모전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찍어 소통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삶이 되었다. 그런데 말하는 것처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의 속성상 한글 맞춤법은 휴대전화 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 말글 발전을 해치는 큰 걸림돌이 되므로, 한글학회는 9년 전부터 해마다 '휴대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어문 규범에 맞게 바르게 작성하는 대회를 펼치고 있다.

한글과
디자인이
만나다!

한글은 디자인 산업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한글 디자인 의상이다. 한글학회는 20여 년 전부터 한글 무늬 옷을 일반에 선보였고, 최근에는 한글문화연대가 해마다 10월에 한글 무늬 옷 공모전과 한글 무늬 옷 맵시자랑(패션쇼)을 펼치고 있다. 독특한 한글 디자인으로 넥타이, 지갑, 가방, 허리띠 등 소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사업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 한글 디자인 액세서리를 만들어 국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해마다 한글 도자기 공예 전시회를 열고 있는 공예가도 있으며, '한글사랑운동본부'와 같이 정기적으로 한글 디자인 상품을 공모, 시상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나라 안팎에 널리 보급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올해로
567년이
되는
한글날

한글은 잘 알려진 대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기기에 매우 적합한 글자 체계이다. 모음자(21개)가 세계 글자 중 가장 많아 자음자(19개)와의 결합에 의해 무한히 많은 글자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과학성 때문이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개의 조합만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는 것과, 음악에서 8개의 기본음을 조합해 무한한 곡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보듯이, 이런 조합의 과학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유연하고 열려 있는 글자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글을 발명하여 사용하고 있는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의 사고는 그만큼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유연하게 열려 있으며, 우리의 저력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넓고 무한하다. 한글날은 바로 우리의 꿈과 힘을 나라 안팎에 널리 자랑하고 떨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금정일이자 공휴일로 기리는 역사적인 한글날이기도 하다.

오래걸려 힘드셨죠?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빨라집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형사보상 결정이 되었어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았던 국민을 위해 권익위가 직접 나섰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례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관련 개선안을 소개한다. 글 김희정

형사보상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2,333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K씨는 이미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 보상청구를 했지만, 형사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건기록을 검찰이 10개월이나 늦게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보상 결정이 그만큼 늦어졌다. 또 한 J씨는 억울한 누명을 써 옥살이를 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형사보상청구를 했으나 8개월이 지나서야 보상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언제 보상을 받을지 모른 채 전전긍궁 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K씨나 J씨처럼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리며 그 사연을 호소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형사보상금 관련 민원은 모두 2,333건. 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이로써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지급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 등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형사보상 결정의 기한을 명시하도록 권고

무죄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심급 법원의 형사 합의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은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건 기록이 상급청의 내부 평가 등의 이유로 해당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록 송부가 늦어져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보상 결정이 늦어져도 형사보상은 결정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 피고인은 기약 없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런 이유로 보상 결정은 무죄 확정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보다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규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L씨는 지난 2012년 3월, ○○고검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2012년도 형사보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예비비가 확보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L씨는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Y씨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후 ○○지방법원으로부터 2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 2008년 ○○지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약 3년이 지난 2011년 9월이 되도록 입금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무죄 피고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형사보상의 특성상 형사보상금의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아 L씨와 Y씨의 사례처럼 형사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형사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하는 금액의 20~30% 정도로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비비

를 쓰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이며, 지급기한 10일이 지나더라도 지연되는 사유나 향후 지급예정시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이 일일이 검찰청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문서, SMS 발송 등)하도록 해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만성적인 예산부족이 지급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신속한 보상금 지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생깁니다

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한 것. 이로써 중고자동차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이뤄졌던 세금탈루와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김희정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 만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권익위가 중고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중 일부 무등록 매매업 행위자들이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로 불법 막는다

이러한 중고자동차 불법전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권익위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행 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이 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 발생을 차단해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SNS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대문 연서(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에서 부지런히 생활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추석 송편도 구매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된 야채와 사과, 배 등 과일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명절음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면 즐거운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sb56acrc (9월 13일)

twitter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트위터

앞으로 광역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특별위 등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 (9월 23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839>

아주 좋아요^^ 모든 행정의 투명성처럼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정명섭)

진작에 집행되어야 했던 것들인데... 지금이라도 공개된다니 한 치의 오차 없이 투명하게... 아시죠? ^^ (doyoungpop)



추석 연휴기간에도 정 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은 정상 운영한다는 사실! 우리의 수호천사들은 쉬지도 않나봐요.

병원 · 약국 · 교통상황 · 민

원 등 추석연휴에도 110이 필

요하면 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찾아주세요~ (9월 12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823>



남들 다 쉬는데 쉬지 못하는 그 아쉬움, 오래전 저 역시 남들은 고향길 가는 명절날 그 분들의 발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지 수호천사님들께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명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되게 됐어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9월 16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834>

넵 더욱 보화가 잘라야 합니다. (최인선)



삶은 두둑 밀창이 좀 떨어져서 그 틈으로 빗물이 새어 양말이 흠뻑 젖었네요. ㅠ ㅠ 눅눅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복 더 상쾌한 하루되세요. (김수일)



경주시의 00중학교에서 학교안전보안관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김모 씨(66세)는 학교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9월 11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821>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다행이군요. 좋은 일하는데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상금미라)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뭔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허세(?)를 부리고 싶은 날인데요. ^^ 여러분은 이런 날에는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 우산은 챙겨 나오셨죠? (9월 10일)

소셜미디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가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다음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은 이메일(limbr@korea.kr)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oveacrc>

twitter



<https://twitter.com/loveacrc>

me2DAY



<http://me2day.net/loveacrc>

Daum



<http://blog.daum.net/loveacrc>

카카오토리



카카오토리 친구찾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acrc'를 검색한 후 권익위 소식을 받아보세요.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 들리는 음성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매우 절박해보였다.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인입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전화를 주셔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 휴대폰 사용이 많이 힘들다는 민원인의 설명을 들으니 단순히 휴대폰 요금을 아끼려 그런다고 생각한 것이 미안해졌다. 민원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의 막내딸이었던 민원인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자녀들 중 선순위 유족을 지정해야 했다. 협의, 유공자를 부양한자, 연장자 순서로 선순위 유족을 선정하게 되는데,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민원인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지만 부모님을 부양한 적도 없고 부모님이 수령한 보상금만 갈취한 채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 또한 부모에게 폭력을 일삼아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살아생전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서로 선순위 유족이 되겠다고 다투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민원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가족사항 조회결과 자살한 어머니 성함 옆에 재혼배우자라고 기재된 사항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부끄러운 가족사를 꺼내며 힘들어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민원인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민원인은 숨을 가담두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원인은 현재 실직한 상태로 아이와 둘이 월세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민원인에게 취업지원에 대한 보훈 수혜 혜택과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점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안내해주었다.

“관할 지청과도 수차례 통화해봤지만 형식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가점취업이라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통화했는데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센터로 전화해도 되죠?” 처음 통화할 때의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은 희망적으로 바뀐것 같았다. 안 좋은 가족사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세히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상담원을 믿고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준 민원인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요청이었지만, ‘제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가슴 속에 진한 울림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다. 민원인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다.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민원전화 서비스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신설 도로로 둘러싸인 교통섬 토지 소유주들의 고충 해결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국민권익 이슈

과로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학생 70.7% 사교육 참여

창원 소사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구제 현장 조정회의 신설 도로로 둘러싸인 교통섬 토지 소유주들의 고충 해결

지난 9월 1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응동1동 사무소에서 소사교차로 신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로써 2년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충이 2개월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권익위의 노력으로 고통 받던 토지 소유자들이 드디어 그 고만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글 김희정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민원인인 토지주와 사업추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소유한 토지가 새로 생기는 도로에 둘러싸여 그동안의 기능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재산 가치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업을 추진한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따라서 관계 기관이 두 곳이라면, 설상가상으로 각각의 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게 보상을 미루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토지 소유자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소사교차로에 고립된 토지 소유자들의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토지

지난 2006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는 응동-장유간 국도58호선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2007년 2월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설하는 소사-녹산간 지방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두 도로는 모두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겼다. 바로 이곳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소사교차로인데, 이 교차로가 생기며 도로로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가 생겨버린 것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55-34 일대의 20필지(14,200㎡)는 10m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인 교통섬이 되어버렸고, 토지 소유자들은 예전과 같이 영농행위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토지 보상은 누구에게

소사교차로 내 토지 소유자들은 도로사업 시행기관 두 곳에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상대 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문제라는 것뿐이었다.



2006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7년 2월부터 시행한 소사-녹산 지방도로 공사로 인해 교차로가 생겨 민원인의 토지가 고립되었으니, 후발 사업 추진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시행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 암거와 진입로를 이미 설치했고, 일부 토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하는 국도공사 때문에 생긴 잔여지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기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소유자들은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 7월 17일에 토지 소유자들이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토지 보상을 위한 중재 이끌어내

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된 후 자료수집과 의견수렴, 세 번에 걸친 현지조사, 관계기관과 신청인 대표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권익위가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9월 11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응동1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석승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윤한홍 경상남도부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조영과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내는 데 성공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민원 도로 개설로 신설되는 소사교차로 구역 내 소재한 이 민원 토지 20필지(14,200㎡)를 분담하여 사업구역에 확장 편입하고, 각각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각각 분담할 토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필지(4,97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8필지(9,224㎡)이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장과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도로 관련 시설로 조성하고,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장은 이 민원 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토지주와 사업추진 기관 모두의 승리

신설도로로 둘러쌓인 교통섬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한 이번 현장 조정으로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도로사업 추진 기관은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사업 추진 기관의 갈등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반복되어 온 민원이 관계기관의 양보와 협조로 오늘 해결되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국민행복 시대에 부응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며 민원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권익위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조정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조정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양 기관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하며 소사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구제 현장 조정회의를 마무리 했다.

Q 지난해 1월,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허가여부를 결정해주지 않고 처리를 지연해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가 그해 11월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법인 허가 신청을 즉시 심사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시정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이유를 들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 넘게 허가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A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고, ▲국방부장관이 한 차례의 수정보완 요청 후 더 이상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의 설립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에 회신한 바도 있으며, ▲관련법령에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Q 저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테스트 및 세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이 아닌 이보다 산재보험료율이 저렴한 '전자제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업무는 기계장치의 수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장의 업무는 반도체 제조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A 중앙행정심위는 위 사업장의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고장난 기계장치의 수리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의 일부를 맡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수리업무는 다른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장치 수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기존에 부과받은 요율보다 낮은 요율의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수년간 일반인을 상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가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인 대표자가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 대표자가 그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가 신청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정직업훈련시설 :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실직자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지정을 받는 경우 수강생들이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수강할 수 있으므로 지정 시설은 수강생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게 됨

A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으면 되고, ▲법인과 자연인은 준별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회사의 경우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비영리법인) 외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었을 뿐, 일반 기업체가 영리행위를 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결을 계기로 산업기술 등을 직접 보유한 일반 기업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Q 저는 선박제조업체의 사내기업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근로자 한명의 눈에 쇠파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사고를 조사한 후 제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저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일을 한 것뿐인데 저를 사업주로 인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익위에서 저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A 청구인은 B사가 의뢰한 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할 뿐 노무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무도급의 경우에 B사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과로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 사연이 소개되면서 전국 8천여 명에 이르는 여군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 김희정

임신한 몸으로 12시간 이상 군 복무

지난 1월, 여군 사관 출신인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인제군 전방 부대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해내고 있었다. 공석인 부대 운영과장의 업무를 대신 맡은 데다 2월로 예정된 북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다. 몸이 붓고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부대 주변엔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병원이 있는 춘천까지 나가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다. 겨우 잠잠 시간만 나는 뻘뻘한 일정에 그런 시간을 내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고 하루하루 버텼다.

일반인도 견디기 힘든 일정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버티던 이 중위. 그 사이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급기야 2월 2일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마침 숙소를 찾았던 남편이 강릉의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뱃속의 아이만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이 중위는 다음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중위의 사망 원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과로로 사망한 군인에게 일반 사망이라니

이 중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3대가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군 복무를 해왔다. 하

지만 이 중위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이 중위 아버지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을 다해 군 복무를 한 딸의 죽음을 보며 아버지는 울분을 참지 못 했고, 이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0일 육군본부에 “이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 받은 마지막 산부인과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중위 소속부대의 지휘관 교체 및 과장 대리 업무 수행 등으로 초과근무가 급격히 늘어난 점, ▲주변 관련자들 모두 이 중위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임신 전후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진술한 점, ▲의료 자문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임신성 고혈압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한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하였다.

mini interview

권익위에서 이 중위의 사망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요?

육군본부가 2013년 4월 19일 이 중위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정하자마자 이 중위의 부친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판단에 대해 유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권익위에서는 실시 조사 등을 통해 국방부의 순직 비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권익위에서 어떤 조사를 하였나요?

2013년 4월 19일 고충민원 접수와 동시에 군 수사기록(변사사건기록) 및 권익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 검찰에서 보내온 이 중위 사망사건 수사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중위가 사망 직전인 2013년 1월 한 달 동안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급격한 초과근무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 교체, 부서장 공석, 북한기 훈련 준비 등이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 30일까지 이 중위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상대로 의료자문을 실시해 급격한 과로가 임신성 고혈압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해,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이 중위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재심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군본부에서 순직을 인정한 것인가요?

이 중위는 아직 ‘순직’으로 인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권익위의 권고 후 9월 12일 육군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하겠다고 하였을 뿐 아직 순직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군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군의 임신, 출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게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전방 지역의 경우 근무하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전혀 없어, 부득이 한 시간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출생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군 부대를 통합해 군(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개설하거나, 주민 감소, 신생아 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번 이 중위의 사망사건이 군의 재심의를 통과해 순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군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70.7% 사교육 참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70.7%이었으며,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대학이 중요하고(29%)',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25%)'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외에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진행한 '사교육 경감방안 관련 정책토론'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었다. ▲학교교육과정 내실화, 교과서 난이도 개편 등 공교육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교육 수요를 낮추어야 하며 ▲특목고, 대입수능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사교육 문제점과 선행학습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권익위는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했으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 시에 활용토록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제공하였다.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서해 최대의 수산물 집합소 서천특화시장

38

꼭 알아두세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40

건강 365

약! 올바르게 먹어요

42

감성충전

가을엔 축제하세요

46

이야기 목민심서

공정(公正) · 청렴(淸廉) · 지성(至誠)

48

뉴스 & 피플

50

독자의 소리



서해 최대의 수산물 집합소

서천특화시장

길가에 핀 코스모스 보다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바로 수산 시장이다.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를 비롯해 알이 짝 찬 꽃게까지, 가을 전령사들을 만나기 위해 수산물의 보물창고 서천특화시장으로 향했다. 글 박영화 사진 안종근

펼떡이는 서해의 싱싱함 가득

서천은 바다를 끼고 있고 교통이 편해 서해의 다양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산물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서천특화시장은 2층 건물에 약 130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수산물특화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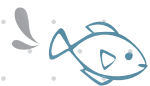
2004년에 문을 연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동(수산물, 2층식당가), 일반동(의류, 농산물), 농산물동, 노점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서천특화시장을 수산물 시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산물은 물론 일반 잡화나 청과물까지 있을 건 다 있는 시장이다. 물론 서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산물이 대표적이지만, 입점한 상점 수로 따지면 청과류 매장이 수산물 매장보다 배 가까이 많다.

그래도 서천특화시장 하면 역시 수산물이다. 홍원항, 마량항, 장항항에서 어획한 각종 활어 및 선어와 서해안 천혜의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조개류가 풍부하다못해 넘쳐난다. 철마다 주꾸미, 도미, 놀



1. 서대와 갈치, 간재미와 꽃게까지,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다.
2. 상인과 손님이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시장 특유의 정이 전해진다.





1



2

1. 수족관에는 광어, 우럭, 도미가 제집 안방인 양 활개를 친다.
2. 철이 철이니만큼 전어와 꽃게가 가장 눈에 띈다.
3. 제철 과일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일반동.
4. 수산물동 앞에는 생선을 말리는 건조대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5. 오일장이 열리는 날, 고추 꼭지를 따거나 파를 손질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6. 가을 꽃게는 수계가 살이 실하다.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쏟아지듯 흘러내리는 속살은 밥도둑이 따로 없다



3



4



5



6



래미, 광어, 우럭, 전어, 오징어, 꽃게, 대하, 대합 등이 있으며, 박대와 김은 서천의 명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대는 서천이나 군산 등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수산물로 말려서 굵고 찢고 조려 먹는데 비린내도 없고 맛이 좋아 인기가 좋다.

인간미 넘치는 삶의 현장

'10월 1일은유, 수산동 휴일이어유~'. 서천특화시장의 수산동 입구에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로 쓰여진 휴일 안내문구가 웃음을 자아낸다. 시장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보이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잘 찍어줘유~"하면서 수족관 곁을 닦아주고, 사진 잘 나오라고 물건들을 정리해주는 모습에서 정이 느껴진다. 한동안 일본 방사능 문제로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고민이었다며 취재

진을 반기는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유독 활기차 보이는 한 상인에게 서천특화시장의 자랑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인간미 넘치는 삶의 현장이라고 소개하면 되지~"라고 말하고는 호탕하게 웃는다.

촬영을 위해 시장을 찾은 날은 마침 오일장이 열리는 날. 손님을 기다리며 잘 마른 고추의 꼭지를 따거나 파를 다듬는 할머니들의 손길이 바쁘다. 어찌나 집중을 하는지 사진을 찍어도 모를정도로 물건 손질에 열중이다. 수세미로 녹슨 그릇을 닦던 할아버지는 수세미를 찍어달라며 취재팀을 부른다. 닦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자 물건만 찍어달라고 부끄러워했고, 한과를 파는 상인은 그냥 찍어도 된다고 카메라를 향해 정글 웃어보인다.

전어나 꽃게냐 그것이 문제

서천특화시장은 해산물을 맛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지금은 서천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일단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 텃까지 있으니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는 것도 당연한 일. 서천특화시장에서는 갓 잡아올린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수산동 2층에는 전문 식당가가 있어 싱싱한 회와 매운탕, 꽃게탕 등 다양한 해물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재밌는 건 1층에서 2층으로 생선을 올려주는 방법. 식당 앞에는 어느 집이고 노란 바구니가 하나씩 있는데, 이걸 이용해 1층에서 2층으로 해산물을 나른다. 썰 새 없이 오르내리는 노란 바구니의 모습에 관광객들의 시선도 멈추게 된다. 연인과 또 가족과 함께 시장 구경도 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이보다 좋은 가을 여행지가 또 있을까 싶다.

서천특화시장 찾아가는 길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86-1

문의 041-951-1445, 953-7249

휴일 매월 첫째주 화요일, 단, 장날(2일, 7일)인 경우 수요일 정기휴일





작년 한 해 동안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들이 크게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개정법이 올해 6월 19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 또는 대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돕는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제도다. 2012년 3월부터 일 년여 동안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가 올해 시행일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되었다.

두 번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회적 배려와 제도개선 시급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고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글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식이 널리 퍼져있는 데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수사·재판관이 피해자의 행실을 추궁하거나 비난하고, 공개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진술을 받으며, 성폭력을 사소한 범죄로 취급해 합의를 중용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해도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이러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자 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올바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 부모나 상담원 등과 같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나 비공개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영상녹화 촬영물을 통해 재판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서도 진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한국사회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의 주장에 맞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고 대리하도록 지정된 전문 변호사가 수사재판과정에서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위해 최대한의 법률적 도움을 무료로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청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검사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본인이 겪은 일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를 중용하거나 협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겁을 먹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면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유용한 증거를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시 동행, 의견서 제출, 무리한 반복 진술 및 2차 피해 방지, 배상신청, 비공개 재판 및 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조치 요청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으로 본인이 가진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가 훌륭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실제로 이용할 피해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도를 시행하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약’ 올바르게 먹어요!

‘하루에 세 번, 식사 후 30분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약 복용법이다. 버릇처럼 실천해왔지만, 모든 약을 그렇게 복용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데... 약도 알고 먹을 때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한다. 올바른 약 복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글 백경미

모든 약을 하루 세 번, 식후에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전에 복용을 해야 하거나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해도 되는 약이 있다. 지방성분에 더 잘 녹는 약이라면 식사할 때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식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에는 공복 시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진통제가 있으며, 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2~3시간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에는 공복 시 흡수율이 증가하는 제산제가 있다. 또 당뇨약 등은 식사 30~60분 전에 복용해야 한다.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약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료와 복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먹어야

정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다.

주스에는 발색제나 감미료 같은 화학첨가물이 들어 있어 약의 흡수에 영향을 끼치거나 약의 효능을 떨어뜨린다. 우유와 먹으면 안 좋은 대표적인 예는 항생제. 우유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약효가 떨어진다. 카페인도 포함된 음료와 복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많은 약물에는 카페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콜라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 카페인 과잉으로 구토나 복통, 불면증, 두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약을 복용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술이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체내의 모든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약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는데, 알코올 또한 간에서 분해되므로 간이 이중 부담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해 약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약의 독성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간에 남게 되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약을 복용한 후에 2시간 안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며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경계약물인 진정제나 수면제 등을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면 약물이 알코올의 효과와 결합되어 심박동과 호흡을 저하시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명심한다.

약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한다. 양은 한 컵 가득한 정도가 좋다. 많은 양의 물로 약을 먹으면 빨리 녹아 흡수가 잘 되는 반면, 적은 양의 물은 흡수율이 낮아지고 목이나 식도에 약이 걸려 녹음으로써 궤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약도 궁합이 있다

약과 약, 약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스피린의 경우 소염진통제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한다. 특히 아스피린이 소염진통제와 만나면 위장관 부작용이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염진통제 성분은 중합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시 주의한다.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도 아스피린이 들어간 약품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항응고제 효과를 과다하게 증가시키기 때문. 진통제나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은 비타민C의 배설을 촉진하므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C가 들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과 두통약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당분이 많은 곡물류와 크래커 등과 같이 먹으면 서로 결합해서 흡수를 낮춰 약효가 늦게 나타난다.

빈혈치료제, 즉 철분제는 달걀 및 유제품, 제산제에 속하는 위장약 등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낮아진다.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물 대신 감귤이나 오렌지주스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철분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칼슘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주의해야 한다. 칼슘보충제가 치료제의 주요성분 흡수율을 떨어뜨리므로 칼슘보충제를 꼭 먹어야 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치즈나 동물의 간 부위 등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주의하고, 기름기가 많은 육류의 경우 약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되도록 삼가도록 한다.

하지만 약 복용 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서’를 읽는 것이다. 약의 적용범위, 사용량, 사용 간격, 유효기간, 보관방법, 부작용 등을 꼭 체크해야 한다. 설명서야 말로 약의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 꼼꼼히 읽어야 할 지침서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Tip 권익위, 조제약 안전사용 및 맨손제조 방지위한 위생기준 마련 권고

소비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약 봉투에 조제약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 ▲정부차원의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체계 마련 및 약사의 복약지도 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체계 마련 및 약사의 복약지도 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실시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가을엔 축제하셔요

한들한들 익새밭도 좋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도 좋다. 알수록 어려운 예술이면 또 어떤가? 축제를 즐기기에 가을만큼 좋은 날씨와 풍부한 감수성을 제공하는 계절은 없을 터. 가을엔, 축제하자! 글 김현선

자료제공

(재)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 / 여주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찾아서 제12회 서울익새축제

익새꽃이 만발한 가을. 아름다운 은빛 물결을 관람할 수 있는 '제12회 서울익새축제'가 열린다. 익새축제는 서울시 하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익새의 모습을 관람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축제 기간 동안 야간개장하는데, 조명을 설치하여 익새의 움직임을 빛의 예술로 승화한 것이 일품. 조명의 변화에 따라 반짝이는 익새의 빛깔과 물결 치는 능선을 보며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가 깊다. 축제 기간 중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와 밴드를 모집하여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 담백하면서도 재미있는 공연이 예상된다. 참여 프로그램 역시 익새로 만들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소박하면서도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일시: 2013. 10. 18~10. 27 / 장소: 서울시 하늘공원 일대



일사: 2013. 9. 28~10. 20
장소: 여주군 신록사 관광지 일원



일사: 2013. 9. 6~11. 3
장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 시내 일원
요금: 성인 7,000원 | 청소년 4,000원 | 어린이 2,000원



천년 도자 역사 따라 떠나는 여행 제25회 여주도자기축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고장 여주에서 여주도자기축제가 열린다. 같은 기간에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발맞추어 여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 전시와 기획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축제는 크게 전시·판매행사와 체험행사, 공연행사로 진행된다. 전시·판매행사에서는 ‘유명인사 특별 전시전’이라는 이름으로 역대 대통령과 세계 유명인사 등의 얼굴이 그려진 도자기를 볼 수 있으며, 테이블웨어를 중심으로 도자기와 타 장르의 협연을 보여주는 생활도자 기획전 ‘일 굽가지 만찬’,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와 여주에 이름난 도예명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및 도자명장 전시전’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여주 전국 접시깨기 대회’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참가자당 2개의 접시가 주어지며 접시가 깨질 때 가장 큰 파편의 길이로 기록을 쟁다. 이때 가장 짧은 길이의 기록을 낸 참가자가 우승하게 되며 1등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시 깨기는 대회와 상관없이 스트레스 해소와 액운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또 체험행사로 도자기 그림 그리기를 비롯하여 흙 높이 쌓기 경연대회, 도자기 낚시 체험, 수제 초콜릿 만들기, 물레체험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여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도자기를 행사장에서 직접 살 수 있어 다양한 도자기를 저렴하게 만나 볼 수도 있다.

2013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국제전 거시기, 머시기

2013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국제전의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다.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임에도 정해진 의미가 없는 모호한 말 ‘거시기, 머시기’.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굳이 의미를 정하지 않아도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시기, 머시기’는 시대를 이해하고 새로운 욕구를 읽어내야 하는 디자이너에게도 적절한 주제다. 막연함 속에서 더 나은 것을 통찰하기 위한 노력이 디자이너에겐 늘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거시기, 머시기’는 ‘것이기, 멋이기’로 표현할 수도 있다. 디자인은 겉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남다른 취향을 나타내는 ‘멋’이라는 것. 즉 일상적인 ‘것’에 창의적인 ‘멋’을 만들어 내는 디자인을 상정한다.

이번 전시는 크게 주제전과 본전시, 특별전과 국제 디자인 워크숍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주제전은 ‘거시기, 머시기’라는 주제를 올드 앤 뉴 (Old and New)의 맥락으로 풀어내 우리의 옛 디자인과 현재의 디자인을 보여주며, 본전시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색할 수 있어 흥미를 끈다.

이 밖에도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나도 디자이너’, 수공예 상품을 판매하는 ‘디자인 마켓’, 다양한 공연이 있는 ‘주말 콘서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신선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그 밖의 가을 축제

- 2013 대학로소극장축제**
2013. 09. 28~2013. 10. 20 | 서울 종로구 대학로
-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2013. 10. 1~2013. 10. 13 | 경남 진주시 남강, 진주성 일원
- 제10회 추억의7080총장축제-추억&힐링**
2013. 10. 9~2013. 10. 13 |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 등
- 제15회 아침고요수목원 국화전시회**
2013. 10. 2~2013. 11. 30 |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 제48회 설악문화제-10월, 속초는 축제 중**
2013. 10. 5~2013. 10. 13 | 강원 속초시 로데오거리, 설악산일원
- 2013 제주마축제**
2013. 10. 12~2013. 10. 13 | 제주시 제주경마공원 내
- 2013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
2013. 10. 12~2013. 10. 13 |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

공정(公正) 청렴(清廉) 지성(至誠)

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일러스트 이운성



임금님 앞에서 여러 번 응시했으나 (屢應臨軒試)
마침내 포의(布衣)벗는 영광 얻었네 (終紆釋褐榮)
하늘의 조화(造化)란 깊기도 해서 (上天深造化)
하찮은 사람 후하게 키워주셨네 (微物厚生成)
둔하고 졸렬해 임무수행 어렵겠지만 (鈍拙難充使)
공정과 청렴으로 지성껏 봉사하리 (公廉願效誠)
임금님의 격려말씀 많기도 해서 (玉音多激勵)
그런대로 나이든 아버지 위로되었네 (頗慰老親情)
『정월 27일 문과에 급제하고 (正月廿七日賜第 熙政堂上謁 退而有作)』

초시(初試)나 반시(泮試: 성균관 생도들에게 보이는 시험) 등 여러 차례 수석으로 합격했으나 전시(殿試: 임금에 친히 참석한 시험)에는 끝내 응할 수 없었던 다산은 마침내 28세의 정월 27일 임금님이 직접 참관한 과거시험에서 갑과(甲科) 2등으로 급제하였다. 일등인 장원은 결격사유로 급제가 취소되었으니 실제로는 다산이 장원급제한 셈이었다. 국가에 인재를 얻었다는 기쁨에 합격자인 다산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정조임금이였다.

정조임금은 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의 재상이 태어난 날이라고 흐뭇해하면서 격려했다고 한다. 임금이 이렇게 기뻐하였다면 합격자 본인인 다산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22세에 진사과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들어가 갈고 닦은 실력이 6년이 지난 이때에서 발휘되었으니 본인의 영광이자 가문의 자랑이기도 했다. 이런 즐거움

과 기쁨을 표현한 시가 바로 앞의 시다. 하늘의 조화가 깊었던 이유로 자신 같은 하자 많은 사람이 급제할 수 있었다고 하늘의 뜻에 영광을 바치고, 여러 차례 수석을 하고도 마지막 시험에는 응할 수도 없었지만 하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합격시켜주었다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둔하고 졸렬한 사람으로 국가에 봉사할 능력이 없다고 겸손해하면서, ‘공렴(公廉: 공정과 청렴)’을 기본으로 삼아 정성을 다해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다산은 과거급제 이후, 비록 1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에 맡았던 모든 직책에서 참으로 공정·청렴이라는 덕목으로 온갖 정성을 바쳐 공무에 임했다. 내직(內職)에 있을 때 지평(持平)이라는 벼슬에 있으며 무과(武科)시험의 감독관이 된 적이 있는데 참으로 공정한 감독관으로 시골의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지만 능력만 있으면 합격시켜 세상에 없는 공정한 시험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다. 암행어사로 농촌의 지방관 업무현황과 실상을 파악하는데도 공정하고 청렴한 활동으로 탐관오리들을 무섭게 징치한 적도 있었다. 황해도 곡산도호부사인 목민관으로 나가서는 공렴에 기본해 그 조그마한 군을 윤토피아로 만들어냈다. 형조참의로 형사사건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죄수가 없도록 온갖 지성을 바쳤던 것. 다산은 일생동안 그 두 글자로 살았다.

이런 다산의 공렴정신은 그의 명저 『목민심서』에도 그대로 드러나 공렴과 지성이 없는 목민관은 백성을 위하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마음에 새길 『목민심서』 제5장 이전육조(吏典六條) 中

속리지본 재어율기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영불행
(東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수령 자신의 몸을 규율하는 데 달렸다.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지만 자기의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여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제지이례 접지유은 연후속지이법
(齊之以禮 接之有恩 然後束之以法)
약릉력학사전도궤우자 불수속야
(若陵轢虐使顛倒詭遇者 不受束也)

그들을 예로써 질서를 세우고 은정으로 대우한 뒤에 법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만약 그들을 업신여기고 억눌러서 혹사하며, 조리도 순서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대우한다면 그들은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원악대간 수어포정사의 입비전명 영물복속
(元惡大奸 須於布政司外 立碑鐫名 永勿復屬)
아주 간악한 무리들의 우두머리들은 모름지기 포정사(정사를 펴는 기관) 밖 에다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다시는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수리권중 불가편임 불가삭소 유죄필벌 사민무혹
(首吏權重 不可偏任 不可數召 有罪必罰 使民無惑)
수리는 권한이 커서 어떤 특정한에게만 장기간 맡겨서는 안 되고, 수리를 자주 불러들여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의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위방재어용인 군현수소 기용인 무이이야
(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잘 등용하는 일에 달렸다. 군현이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좌우근습지언 불가신청 수악한화 개유사의
(左右近習之言 不可信聽 雖若閑話 皆有私意)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쓸데없이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말에는 다 사사로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NEWS & PEOPLE

2013.9+10

01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대상 '청렴'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안전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공직비리 및 구

조적 부조리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12년도 감사 및 반부패 활동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처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신뢰받은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청렴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안전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한 자세를 당부했다.



03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 기념식 개최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와 보건복지부, 미래 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총 11개 부

처가 운영하는 정부콜센터들이 9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권익위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 콜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청사로 이전한 정부콜센터는 이전 안정화 작업 및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대국민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별 콜센터 장비의 통합·공동 활용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정부콜센터 민원상담 서비스 품질 표준화, 국민의 소리 통합관리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02 국민신문고 해외 수출 업무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박수용)이 국민신문고 해외 수출을 위해 손잡았다. 국민신문고 해외 홍보를 위한 툴킷 제작과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대상으로 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기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민신문고를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제도적 환경, 운영 자원과 시스템 개발 내용을 담은 툴킷을 연말까지 제작하여 해외 홍보와 컨설팅용으로 사용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튀니지 총리실과 공동으로 튀니지의 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해 결과를 튀니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튀니지 정부가 시스템 도입을 결정할 경우 우리 국민신문고가 첫 번째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서 국민신문고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ICT 관련 정책과 사업개발, 국내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04 동티모르 부패방지위원회와 양자협력 방안 논의

권익위는 지난 9월 2일 오후 권익위 청사에서 동티모르 부패방지위원회와 양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객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오른쪽)이 동티모르 부패방지위원회 조세 안토니오 부위원장(왼쪽)에게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05 울산, 전북지역 행정심판 순회구술청취 실시



권익위 홍성칠 행정심판부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울산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하였다. 중앙행정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서 서면심리 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거주자·노약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열고 있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월 전북도청 방문까지 총 7회 실시하였다.



07 추석명절 소외계층 현장방문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릴레이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성보 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연서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 및 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에 귀 기울였으며, 같은 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송편을 나누어 주는 등 배식봉사에 앞장섰다. 또 앞선 9월 11일에는 권익위의 사무처장도 아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배식 봉사과 위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행정심판부위원장도 서대문종합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위문 봉사를 실시하는 등 권익위의 차관이 술선수범해서 봉사에 힘썼다. 권익위는 소외된 계층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에 앞장설 계획이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정여행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편리성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여행을 하고 싶네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학교 이야기를 기사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이 점점 상실 되고 청소년의 비행이 과도해지는 요즘 문제가 크죠. 대안은 없을까요?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사람들은 '요즘같은 시대에 무슨 식중독?'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그런데 저는 식중독에 걸려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식중독을 조심했으면 했는데, 국민권익이 해결해 주었네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김유리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이야기 목민심서가 재미있죠. 정치계 인물의 끊임 없는 비리를 전해 들으면 원통한데, 그들도 이야기 목민심서를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시대가 풍족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낭비도 찾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곳이나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공무원·기관을 전해 듣고 싶네요. 분명히 솔선수범하는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서여선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간추린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가 유익합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MOU 연장 체결 뉴스는 감동이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역사사지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권익도 보호된다면 좋겠네요.

정승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육지 속 섬마을 수암마을 주민의 불편함이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가 생긴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주변에도 수암마을처럼 원치 않게 피해를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숨어 있는 곳도 있겠지요. 다음 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불편함을 해결하는 좋은 기사 접하고 싶습니다.

전재열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ACRC QUIZ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기관들의 원활한 정책 교류와 업무협력을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는?

- ① 반부패기관장회의
- ② 반부패위원회회의
- ③ 반부패정책회의

2 다음 중 가을에 열리는 축제가 아닌 것은?

- ① 여주도자기축제
- ② 서울역새축제
- ③ 구례산수유꽃축제

3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은 물론 일반 잡화나 청과물 등 130여 개의 점포가 즐비한 시장은?

- ① 서천수산물시장
- ② 서천특화시장
- ③ 서천잡화시장

지난호 정답 :

- 1. ③정부 3.0
- 2. ②수암마을
- 3. ①공정여행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드립니다. 9+10월호 응모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7+8월호 당첨자 상품은 10월 31일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겐 폰



누군가에겐 댓

불법 전화영업과 명의도용 사기 피해!
통화할 때 10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기,
통화할 때 10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www.msafel.or.kr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폰 및 개통폰의 할부금 대납을 약속하는 불법 전화영업
전화 가입 시, 가입 조건과 다른 경우 최대 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두약속, 가입신청서와 다른 온라인 가입 사기
구두약속은 가입신청서와 별개의 사기 행위로, 통신사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휴대폰 개통에 따른 대출을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유도하는 개통 사기
범죄용, 스캠발신용, 소액결제용 등으로 쓰이며, 피해는 명의를 대여해준 고객 책임입니다.
- 대포폰 및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해외에서 거래하는 해외 밀반출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며, 불과 2~3일 내에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재택 근무 및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고용을 빌미로 불법 명의 도용
업무용 폰 개통 시 연체금 및 할부금으로 몇 백만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중고 스마트폰을 팔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
인증받지 않은 매입업자를 피하고, 거래 전에는 공장초기화 등으로 정보를 확실히 삭제해야 합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주소

□□□ -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 1 ~ 2013. 12. 31

서대문우체국
제631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1 2 0 - 7 0 5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9+10 vol.34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독자들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이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격려, 충고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 크게 들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4.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구독자이지만 앞으로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아래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현재 구독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구독자 정보(이름 등)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봉투에 인쇄된 정보 _____ 실제 정보 _____ 연락처 ☎ _____

※ 위 내용은 메일(mbr@korea.kr)로 보내주셔도 되며, 회신이 없는 경우는 계속 구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CRC QUIZ

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기관들의 원활한 정책교류와 업무협력을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는?

- ① 반부패기관장회의 ② 반부패위원회회의 ③ 반부패정책회의

2 다음 중 가을에 열리는 축제가 아닌 것은?

- ① 여주도자기축제 ② 서울역새축제 ③ 구례산수유꽃축제

3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은 물론 일반 잡화나 청과물 등 130여 개의 점포가 즐비한 시장은?

- ① 서천수산물시장 ② 서천특화시장 ③ 서천잡화시장

www.acrc.go.kr

독자엽서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식지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